

# 연구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위한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협력과 정책현안 연구

A study on the cooperation and policy issues of special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고 형 곤(Hyung-Gon Ko)\*

## 〈 목 차 〉

- |   |  |
|---|--|
| <p>I. 서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제제기</li> <li>2. 연구방법</li> </ol> <p>II. 국내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현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발전</li> <li>2. 통계를 통해 본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현황</li> <li>3.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협의회 조직의 발전</li> </ol> <p>III.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정책의 문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개념과 범위의 혼란</li> <li>2. 도서관법상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관련규정의 미흡</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부처별 디지털 지식정보자원 유통정책 경쟁</li> <li>4. 전문지식정보 자원관리에 대한 국가정책의 부재</li> </ol> <p>IV.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정책 제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개념과 범위의 확장</li> <li>2. 범국가적 지식정보 조정기구 설치</li> <li>3. 민간부문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활동지원의 제도화</li> <li>4. 연구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위한 선결과제</li> </ol> <p>V. 결론</p> |
|---|--|

## 초 록

디지털 자원의 네트워크 이용이 증가하는 정보사회에서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는 연구정보의 전문유통채널로서 새로운 기능과 역할로 확장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발전 및 협력현황을 살펴보고, 개념, 범주, 법규, 도서관정책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어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활동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첫째,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개념의 재정의, 둘째, 범국가적 지식정보 조정기구 설치, 셋째, 민간부문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활동지원의 제도화, 넷째, 연구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위한 선결과제 등으로 정리하였다.

주제어 : 전문도서관, 전문정보센터, 도서관정책, 전문도서관협의회, 도서관협력

## Abstract

In the information society where the utilization of digital resources via networks has increased, expanded are the role of special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as specialized channels for communicating research inform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mong special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and the problems relating to their concepts, scopes, regulations, and polici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activities of special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reviewed are: 1) how to redefine the concept of special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 2)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for co-ordinating research information at national level, 3) to support systematically the activities of special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in the private sector, and 4) to resolve the problems in improvin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ir information activities.

Key Words : special library, information center, library policy, special library association, library cooperation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자료센터장(kohg@kisti.re.kr)

• 접수일 : 2002. 8. 14

## I. 서 론

### 1. 문제제기

최근까지 전통적 문헌유통의 중심축을 형성하며, 공동체 지식자원 유통에 대한 독점적 지위와 역할을 누려왔던 도서관 활동은, 네트워크 기반기술을 동원한 다양한 디지털자원 생산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새로운 정보서비스 환경을 맞고 있다. 문헌정보에 주력하였던 도서관 으로서는 새로운 정보유통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상업적 정보생산자들과 디지털자원을 두고 무제한적인 경쟁에서 생존해야 하는 기술적 변신을 숙명으로 맞이하고 있다.<sup>1)</sup> 그 동안 공공적 사회이익 실현을 위해 봉사한다는 도서관 활동의 명분은 공동체 성원들의 호의적 지원을 유인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지만, 지식정보자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이윤을 도모하려는 상업적 정보주체들과의 경쟁에서는 별다른 실리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전문 연구기관, 협회, 단체, 기업 등의 대외사업을 후방에서 지원하던 형태로 운영되었던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전통적 정보제공 활동은, 사업의 대외 목적을 전방에서 선도하며 해당 분야별 전문정보생산자들과 경쟁하는 차별화된 정보제공자(Information Provider)로서 강조되고 있다.

정보유통기술의 혁신에 따른 이 같은 정보서비스 환경의 변화는 이제까지의 전문도서관 정보활동에 대한 반성과 현안분석을 통해, 장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정보사회 기초 인프라인 전문정보주체로서의 역할정립에 있어 새로운 개발전략과 정책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의 당면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집계되었던 한국도서관통계를 분석하는 하는 정량적 분석과 함께, 관련 연구문헌조사, 법령검토, 관련자 면담, 인터넷탐색 등을 통한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는 현황분석을 기초로 하였다.

통계분석과 관련해서는 편의상 서울시 소재 전문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인 현황을 추론하였으며,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협력활동의 역사적 전개와 최근 실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협의회에 대한 담당자면담, 인터넷탐색, 문헌연구를 통해 자료를 수

---

1) Mount, Ellis & Massoud, Renee. *Special Libraries & Information Centers, 4th ed.* -Washington, D.C. : Special Library Association. 1999. pp.3-16.

집하였다. 국가적 차원의 전문도서관 정보정책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상 문제조항과 행정과정에서의 당면문제를 주요 사안별로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개선된 구체적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

## II. 국내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현황

### 1.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발전

국내에서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가 별도의 관종으로 비중있는 정보활동 주체로 등장하는 것은 1960년대 5.16군사정권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과학기술진흥 정책에 따라 각종의 정부출연연구소 및 투자기관들이 잇따라 설립되면서부터였다. 한국전쟁 후 1955년 15개에 불과하였던 전문도서관은 1959년 원자력연구소를 필두로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969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 1971년 한국개발연구원, 1973년 한국과학기술원, 1975년 한국표준연구소 등이 연이어 설립되면서, 1970년 134관, 1981년 191관, 1986년 247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sup>2)</sup>

성장기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활동의 발전을 주도하였던 과학기술 분야 관변 연구기관들은, 1973년부터 서울 청량리 흥릉의 연구개발단지를 중심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협력체제를 주도하면서, 도서관 정보조직 및 관리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등 성장기 우리나라 지식정보유통의 중핵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국내 최초로 전문도서관 정보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1968년) 제정을 계기로,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는 과학기술분야 전문도서관간의 협력활동을 주도하는 대표기관으로 부상하였다.<sup>3)</sup> 그러나 불행히도 동 기관은 개발성장기 전문정보활동에 대한 국가적 방임과 부처간 이해조정을 이유로 그 위상 및 역할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으며, 우리나라 전문도서관 활동의 정책부재를 실증적으로 체현하였다. 동 기관은 1962년 설립당시 문교부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산하조직으로 출발하였지만, 1967년 신설 과학기술처로 이관되었고, 1982년에는 국제경제연구원과 통합되어 상공부 산하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IET)’으로 바뀌었으며, 1984년에는 ‘산업연구원(KIET)’으로 명칭이 바뀌고 1988년에는 다시 부설 ‘산업기술정보센터’로 분리 설치되어, 1991년 독자적인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거하는 ‘산업기술정보원(KINITI)’으로 개편되었다. 1999년에는 산업자원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술연구회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2)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백서. 서울: 동 협회. 1992. pp.175-220.

3)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10년사. 서울: 동 센터. 1972. pp.22-58.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

2001년에는 같은 공공기술연구회 소속의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와 통합되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4)</sup>

한편, 과학기술분야 이외에도, 성장기 경제발전의 전개와 함께 산업 및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한국개발연구원(1971년), 산업연구원(198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0년) 등의 국책연구기관들이 등장하면서, 이들 기관의 연구 사업을 지원하는 산업 및 경제 관련 전문 정보서비스 활동이 비중 있는 전문도서관 활동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사회발전으로 확장된 국가의 통치활동이 체계적인 전문정보 수집과 관리의 필요성을 제고하게 되면서, 의원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도서관의 역할이 '국회도서관법'(1988년)으로 마련되고, 사법부의 법원도서관이 '대법원규칙'(1989년)을 근거로 설립되는 등, 정부 내 전문정보수요의 증가는 부처마다 전문지식정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확인시키며, 부처 간 지식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주도권경쟁을 유발하게 되었다.

- 1955년 한국도서관협회 설립
- 1959년 한국원자력연구소 설립
- 1962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 설립
- 1963년 도서관법 제정
-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설립
- 1967년 과학기술처 신설
- 1969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 제정
- 1971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립
- 1972년 '서울 연구개발단지 도서관실무자협의회' 발족
- 1973년 한국과학기술원(KAIS) 설립
- 1988년 국회도서관법 제정
- 1989년 법원도서관 설치
- 1990년 문화부 신설 (도서관정책과)
- 1990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설립
- 1991년 산업기술정보원(KINITI) 설립
- 1991년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단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 설립
- 1999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설립
- 2000년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정
- 2001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 2001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설립

4) 김두홍. "역대정부의 과학기술 정보정책 분석 및 평가." 정보의 세계. 부산: 부산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동창회. 1993. pp.250-296.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성장의 내력을 특징적으로 요약한다면, 1960~70년대의 개발독재 시기가 정부지원연구소 및 투자기관들이 구축한 과학기술분야 전문정보센터들에 의해 전문도서관 협력활동으로 주도되었다면, 본격적인 경제성장이 일 정 궤도에 진입하였던 1980년부터는 민간기업 활동의 양적 성장과 함께 이들에 대한 산업기술 관련 정보서비스 활동이 비중있는 부문으로 등장하였고, 1990년대 이르러서는 자 발적 시민운동단체에 의한 NGO활동의 정착과 함께, 사회단체 및 기관소속 정보서비스 주체들이 전문도서관 협력활동의 공간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통계를 통해 본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현황

한국도서관협회가 공식 발족하면서 시작된 도서관통계에 의하면, 1955년 당시 특수도서관의 수가 15개관에 불과하였던 것이 2001년 현재 578관의 전문도서관으로 무려 38배나 증가하였다.<sup>5)</sup>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표 1>에서 나타나듯이 1관당 평균 직원 수에 있어서는 오히려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1관당 평균장서 수에 있어서는 약 40% 정도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최근 통계에 포함된 전문도서관들의 대부분이 양적 규모에서 영세한 소규모 자료실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와 같이 정보자원이 양적으로 성장하였음에도 인적 규모가 감소한 현상은 전문도서관에 있어 특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표 1> 관종별 도서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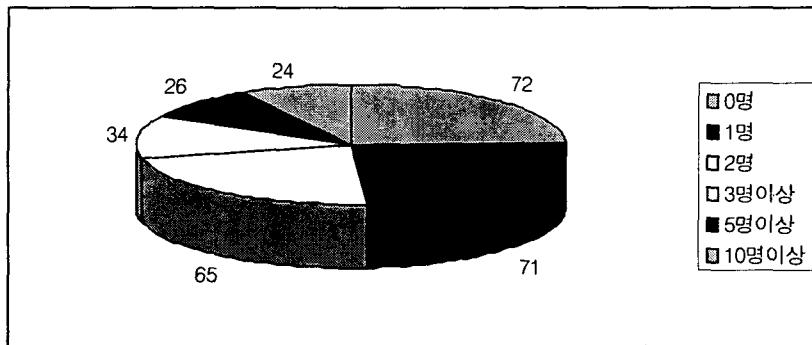
연도	전문·특수도서관수(관)	직원수(명)	1관당 평균 직원수(명)	장서수(권)	1관당 평균 장서수(권)
1955	15	103	6.9	187,374	12,491
1960	41	188	4.6	494,284	12,055
1965	71	472	6.6	623,850	8,786
1970	134	533	4.0	1,548,550	11,556
1975	96	632	6.6	1,296,556	13,505
1981	191	627	3.3	2,544,607	13,322
1986	247	1,004	4.1	3,965,343	16,054
1990	358	1,481	4.1	6,037,322	16,864
1995	418	1,736	4.2	8,141,132	19,476
2001	578	2,056	3.6	10,106,518	17,485

자료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일람” 1955~1966, “한국도서관통계” 1967~2000.

5)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서울: 동 협회,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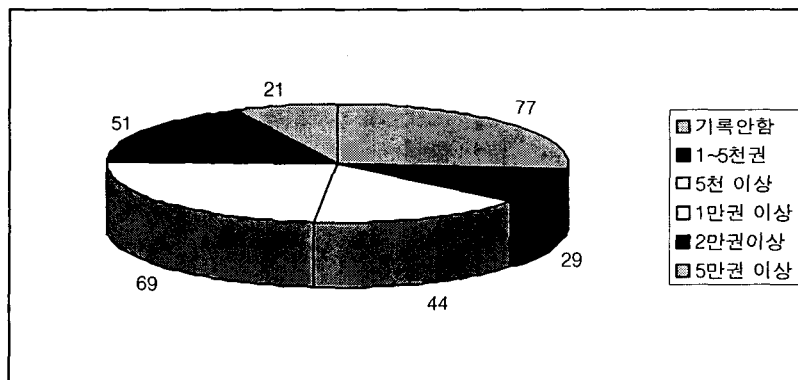
이들 도서관의 양적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편의상 2001년 한국도서관통계에 나타난 서울시 소재 292개 전문도서관의 인적규모를 분석하였더니, <표 2>과 같았다. 292관중 직원통계가 빠지거나 0으로 제시된 곳이 72관(24.6%)으로 가장 많고, 이들을 제외하고 직원수가 3명 이하로 집계된 도서관이 163개관으로 전체의 55.8%나 되어 앞의 통계에서 추측되었듯이 전문도서관 규모의 영세성을 확인케 하고 있다.

<표 2> 전문도서관 인적규모 (단위: 관)



전문적인 정보서비스에 적절한 인적구조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문도서관 사서직원 배치기준을 준거하여 보면, 전문도서관은 법적으로 장서 3,000권 이상, 사서직원 3명 이상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3명 미만의 사서를 배치하고 있는 도서관이 136관(46.6%)이나 된다는 점은 법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할 뿐더러, 전문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서비스와 디지털자원개발을 담당해야 하는 전문도서관의 역할확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인력 여건으로 판단된다.

<표 3> 전문도서관의 장서규모 (단위: 관)



한편 이들 전문도서관 292개관의 장서규모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표 3>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10,000권 이하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이 25%나 되고, 20,000권 이하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이 거의 절반(48.6%)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전문정보센터로서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기초적 자원으로서 문헌자료여건 또한 인적여건과 마찬가지로 매우 부실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소재 전문도서관 292관을 운영주체별로 분류해 보았더니, 정부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전문도서관이 49관(16.8%)으로 가장 많고, 민간기업 46관(15.8%), 정부기관이 44관(15.1%), 일반 사회단체 33관(11.3%) 등의 순이었다. 기업이나 금융, 언론 등의 순수 민간 부문의 전문도서관 활동에 비교해서,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관변 연구기관 등의 정부기구와 관련된 전문도서관 활동이 매우 비중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운영주체별 도서관수 (단위: 관)

소속기관	도서관수	비율(%)
정부기관	44	15.1 %
정부투자기관	49	16.8 %
관변연구기관	26	8.9 %
공익사업 단체	25	8.6%
민간기업	46	15.8 %
언론기관	17	5.8 %
은행	16	5.5 %
일반 사회단체	33	11.3%
기타	15	5.1 %
합	292	100.0 %

마지막으로 '한국도서관통계 2001'에 나타난 서울시내 전문도서관 292관의 명칭을 분석해 보았더니, 자료실(26%), 도서실(19.5%), 정보자료실(7.2%) 등의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고, "자료", "도서" 혹은 "정보"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226관이나 되었다. 이는 전체 292관 중 소속기관명칭으로 등록된 전문도서관 62관을 제외하고 230관에서 4개관을 제외한 숫자로 조사대상 전문도서관의 거의 전부가 해당되는 것이다.

이들 명칭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개별 정보봉사 주체로서 성격이 부가되는 "도서관"이나 "센터" 등의 명칭을 쓰는 곳이 31관(10.6%)인데 비해, 모 기관에 부속된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실" 혹은 "부", "팀"의 명칭을 쓰는 곳이 199관(68.2%)으로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근의 팀제 조직 확산과 관련하여 “팀”의 명칭을 쓰는 전문도서관이 11관 (3.8%)이나 된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이는 통계상 집계된 전문도서관들의 조직 내 역할이, 사서들의 정보활동을 위주로 구성되는 “자료실” 혹은 “도서실” 등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정보유통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추론되는 바로서, 최근 전문도서관의 역할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의 일단으로 지적할 수 있다.

〈표 5〉 전문도서관 명칭분석

전문도서관 명칭	기관수
자료실	76 (26.0%)
(소속기관명칭)	62 (21.2%)
도서실	57 (19.5%)
정보자료실	21 ( 7.2%)
도서관	17 ( 5.8%)
정보센터	8 ( 2.7%)
도서자료실	7 ( 2.4%)
정보실	3 ( 1.0%)
행정자료실	3 ( 1.0%)
기타 자료센터(2), 자료관(2), 지식정보센터(2), 기술정보실(2), 문헌정보실(2), 조사부(2), 정보팀(2), 자료팀, 정보관리실, 정보관리처, 정보종합센터, 정보도서실, 정보자료팀, 정보지원팀, 정보관, 문헌정보자료실, 문헌정보자료팀, 연구정보실, 교육자료실, 자료정보팀, 자료정보센터, 자료열람실, 자료부, 도서정보실, 도서자료관리팀, 도서실운영팀, 도서열람실, 조사연구팀, 조사자료부, 신문지원팀, 멀티미디어센터	38 (13.1%)
합	292 (100%)

### 3.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협의회 조직의 발전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란 공중이 요청하는 지식자원을 수집·조직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하는 기관으로서, 자관의 보유자원만으로 만족스런 이용자봉사를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가정이 아니다. 하물며 정보생산량이 급증한 지식정보사회에서 개별 도서관들은 불가피하게 비용 대 효과의 경영적 관점에 의거 핵심장서 위주의 자원개발 전략을 추구하며, 도서관 상호대차를 통해 미 보유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원공유를 위한 협력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심도 깊은 전문주제에 대한 신속한 정보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은, 그



특성상 해당 분야별로 정보생산자 및 제공자들과 긴밀한 협력활동이 전제가 되어, 자원공유를 위한 도서관 본래의 협력활동이 특별히 강조되어 왔다.<sup>6)</sup>

우리나라에서도 전문도서관의 양적 성장과 함께 여러 주제 분야에서 전문정보자원의 공유를 위한 도서관간 협력활동이 발전되었다. 관련 전문도서관들 간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는 분야로는, 의학분야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과학기술분야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신학분야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사회과학분야 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 등 8개 조직이 확인되었다.

이들 전문도서관협의회 조직들 중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 등 3개 단체는 2001년 1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보자원공유를 위한 협력방안’을 주제로 정보관리 합동 심포 지움을 개최하여, 디지털자원 공동개발 및 활용과 전문정보기관 현황분석 및 발전전략에 대한 발제와 종합토론 등의 기회를 가졌다.

2002년 6월 현재 조직적 협력활동의 성과가 확인되는 국내 전문도서관들간의 협력조직은 아래와 같다.

#### 1)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우리나라 전문도서관 협력사업이 가장 먼저 시작된 분야는 의학도서관들이었다. 이들 의학 관련 도서관들은 비교적 일찍이 성장한 양적 규모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의학정보 공유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의과대학도서관들이 중심이 되어 1968년 6월 18일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를 발족하였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의학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 아래, 의학 교육기관, 각급 병원, 의학 관련단체 등의 소속도서관을 대상으로 문헌자료의 상호대차, 연구회, 강습회 등을 통한 전문적인 의학정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72년부터 의학 관계 정기간행물 종합목록을 발행하였고, 1978년부터는 회원도서관간 잡지의 원문을 제공하는 상호대차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986년부터 국내 의학문헌 정기간행물의 기사색인을 제공하는 Korean Index Medicus를 발행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과 공동운영하는 MEDLIS(Medical Libra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회원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학술잡지 종합목록 검색과 상호대차신청 및 원문복사서비스, 학술잡지 기사색인 검색 등을 인터넷상 웹 서비스로 실시하고 있다.

2002년 5월 28일 현재, 가톨릭대학교 도서관 등 의과대학도서관이 39개관, 강남병원 의학도서관 등 병원도서관이 88개관, 국립보건원 기술정보관리실 등 의학 관련연구소가 10개소, 녹십자 등 제약회사가 9개사 등등 모두 146개 회원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http://medical.snu.ac.kr/>, cited 2002.6.20).

6) Mount, Ellis & Massoud, Renee. 전게서. pp.249-261.

## 2)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STIMA)

과학기술분야 전문도서관들의 협의회는 1972년 당시 서울 홍릉에 소재한 서울 연구개발단지내 한국개발원, 과학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한국과학원,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6개 연구기관이 도서관 실무자 협의회를 결성하여 자료수집분담, 장서종합목록작성과 상호대차제도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발족하였던 '서울 연구개발단지 도서관 실무자 협의회'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동 기구는 1977년부터는 대덕연구개발단지의 연구기관들이 참여하였고, 1978년에는 창원의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단지도서관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5년부터 회원대상을 자연과학분야로 한정하면서 정부출연연구소를 주축으로 정부투자기관 연구소, 민간연구소, 특수교육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로 발전되었으며, 1994년부터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사업시작 다음해인 1973년부터 회원기관 소장 서양서 12,308권을 컴퓨터로 입력하여 제작한 '과학단지장서종합목록'을 발간하였고, 이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장서목록이었다. 이 목록은 1972년부터 회원기관들이 새로 입수한 단행본 자료를 담아 매년 발행되어 오다가 1991년 당시까지의 누적분인 서양서 60,316종의 종합목록인 '과학단지장서종합목록 1-15 (Union catalog of Research Complex, 서양서편 : 1972-1990)'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고, 대신 이들 종합목록으로 확보된 누적 데이터는 1992년부터 회원기관 간 온라인 목록서비스 환경에서 통합목록DB로 승계되었다.

2002년 현재 15개 민간기업 부설 연구소를 포함해 모두 56개 기관이 가입되어, 회원기관 간 정보교환, 업무협조, 연구활동, 상호대차, 원문정보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http://stima.kaist.ac.kr/>, cited 2002.6.20).

## 3)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Korean Theological Library Association)

신학분야 전문도서관들의 협의회는 전국의 신학도서관 발전을 도모하며, 신학연구 및 목회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여개 신학도서관 실무자들에 의해 1973년 4월 16일 창립되었다. 동 협의회는 단순 친목도모를 넘어, 신학도서관 관리운영 기술향상과 신학서지활동의 협력, 직원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학분야 석박사학위논문DB구축, 연속간행물 통합목록구축, 기사색인 공동작성, 신학분야 해외전자저널 구독 콘소시엄 구성, 종교관계 전문웹사이트 구축 등의 협력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협의회는 1973년부터 '한국교회문헌분류법'을 비롯하여, '신학도서관 신착도서목록', '한국신학관계석박사학위논문목록집', 정기간행물 '신학도서관' 등의 '신학문헌서지총서'를 발간하여 왔으며, 국내외 신학관련 정기간행물 종합검색서비스를 위해 27개 신학대학이 소

장한 동양잡지 598종, 서양잡지 739종 등 총 1,332종에 대한 통합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학분야 정기간행물 기사색인을 확장한 도서관 간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도서관별 DB입력분담과 기술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2002년 현재 고려신학교 등 52개 신학교 도서관과 소망교회 등 3개 교회 및 기관의 도서관을 합쳐 모두 55개 회원 도서관이 협력사업을 지속하고 있다(<http://www.ktla.or.kr/>, cited 2002.6.20).

#### 4) 한국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KOSSIC)

사회과학분야 전문도서관들의 협의회는 우리나라 사회과학분야 정보자료유통기관간의 상호교류와 정보교환, 정보관리기술협력 등을 통해 사회과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0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30여개 기관이 참여하여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은 사회과학 관련자료의 상호교류 및 공동 활용, 상호대차제도 운영, 정보관리 정보교환, 정보자료 관리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출판사업 등을 내세우고 있다.

여느 전문도서관 협의조직과 같이 회원기관 간 통합목록구축과 상호대차의 실시, 원문복사서비스체제 구축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2002년 5월 현재 국토연구원을 비롯하여 모두 3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http://www.kirsa.or.kr/>, cited 2002.8.12)

#### 5) 건설정보관리협의회(KCIMA)

1995년 6월에 국내 건설 분야의 업체, 연구소, 협회 등 관련단체 및 건설업 종사자 개인 등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상호협력, 공동 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보관리업무의 효율화와 소속기관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조직된 정보자료실간의 협의기구이다.

협의회 운영규칙을 두고 회원사간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되며, 자료분과위원회를 통해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DB와 규격DB의 구축과 자료실 소장 자료의 상호복사 원문제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하 10여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http://www.kcima.co.kr/>, cited 2002.6.20).

#### 6) 지식경제정보협의회

전경련 회원사 및 경제연구소 50여개 기관이 참여하여 운영되는 경제 및 경영관련 지식정보관리부서 협의기구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식경제센터를 간사로 하여 2001년 7월 조직되었다. 기업체별로 지식정보관리 담당부서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서를 두고 있는 정보자료실들을 중심으로 상호이용과 자원공유시스템 구축 등을 목적으로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춘계 및 추계 지식정보자원관리 세미나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http://www.fki.or.kr/>, cited 2002.6.20).

7) 전국은행정보자료실 실무자협의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정보자료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은행 22개사, 국내진출 외국계 은행 38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은행자료실간의 상호대차 및 소장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등을 목적으로 꾸준한 협력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1989년 이래 정기간행물 종합목록과 신착자료 속보, 발간자료의 상호교환 등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금융정보자료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회원사 소장 정기간행물 통합검색을 지원하고 있다(<http://www.kfb.or.kr>, cited 2002.6.20).

8) 한국조사기자회(Korea Press Researchers Association)<sup>7)</sup>

전국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조사 및 정보 자료 부서에 근무자를 회원으로 한 친목단체이자 회원들 간의 정보교류와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전문직 단체이기도 하다. 1987년 창립되어 전국언론사 기사자료 표준분류표를 발행하고, 해마다 실무연구 세미나를 개최하며, 1988년부터 기관지 ‘조사연구’를 연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하부조직으로 분과위원회를 두어, 홈페이지 운영 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운영을 통한 정보교류활성화와 대외홍보증진을, 출판위원회에서는 회원저술활동지원과 자체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대외협력 위원회에서는 대학 석·박사 학위과정의 장기교육추진과 전문성 강화목적의 재교육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2002년 5월 현재 회원기관으로는 경향신문 등 일간신문사 18개사, KBS 등 방송사 8개사, 인천방송 등 지방언론사 13개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http://www.josa.or.kr/>, cited 2002.6.20).

### Ⅲ.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정책의 문제

#### 1.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개념과 범위의 혼란

일반적으로 전문도서관이라 하면, “설립기관·단체의 소속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도서관및독서진흥법

---

7) 한국조사기자회는 사실 전문도서관협의조직이라기 보다는 전문도서관에 종사하는 조사기자들의 친목단체의 성격이 짙다. 다만 이들의 구체적 사업내용에서는 전국언론사 기사자료표준분류표 작성이나 관련 콘텐츠개발 등의 정보공유 및 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편의상 전문도서관협의조직으로 간주하였다.t

제2조 제7항) 및 정보센터를 말하며, 전문 주제에 관한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 조직, 축적하여 연구자 및 관심 있는 공중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말하여 진다.

그러나 전문도서관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고정된 개념일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전문도서관의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하는 한국도서관통계의 전문도서관 부분에 실린 도서관들을 살펴보면 대략 전문도서관의 범위와 개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제 통계에 집계된 전문도서관의 범위 내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같은 국립도서관 성격의 대형 도서관부터 공공적 기능상 도서관이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자료실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와 성격이 다양한 도서관들이 포함되고 있다. 국가기관, 관변연구소, 공공협회, 사회단체, 민간기구, 공사, 기업체, 기업체 부설연구소, 병원, 언론기관, 외국공관 등등에 부속된 다양한 성격의 도서관뿐만 아니라, 관중 구분이 애매한 국회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새마을 이동도서관, 구립 새마을도서관, 의과대학 부속 의학 도서관 등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sup>8)</sup>

이 같은 현상은 전문도서관을 뜻하는 "Special Library"의 표현으로 기업, 의학, 법률, 종교, 연구 분야 등의 전문도서관 활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다.(<http://wwwsoc.nii.ac.jp/jla/index.html>, cited 2002. 6.20) 미국에 있어서는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들이 의학(Medical library), 정부(Government Library), 연구(Research Library), 군사(Military Library) 등의 분야별로 구분되고, 'Special Library'의 개념보다는 세분되어 통용되고 있는 듯 하다. 다만 이들도 도서관 통계의 경우 'Special Library'의 범주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는 점에서는 우리의 구분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http://www.ala.org/library/fact1.html>, cited 2002.6.20).

한국도서관통계에 열거된 전문도서관의 범주는 공공, 학교, 대학 도서관을 제외한 기타의 도서관을 한데 모아 놓은 성격이 두드러진다. 이는 다시 말해 전문도서관 고유의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기보다는 구분기준이 명확한 공공, 학교, 대학 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을 편의상 전문도서관으로 집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전문연구정보센터와 같이, 대학의 특정학과에 의해 인터넷상에 구축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분야별 전문연구

정보센터들은 분명히 전문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서지목록 정보와 원문정보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도서관의 유형으로 전문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정보센터임에도 한국도서관통계에는 집계되어 있지 않다.<sup>9)</sup> 물리적인 시설과 공간을 갖지 않는 전자도서관의

8)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서울: 동 협회. 2001.

9) 전문연구정보센터는 연구정보의 최대 생산 및 이용자인 대학소속연구자간의 공동 활용체제를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1995년부터 한국과학재단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며, 2002년 8월 현재 전국16개 대학에 21개의 전문연구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주제 분야별로 연구정보를 수집·가공하고 DB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전문연구정보센터 실무협의회의 홈페이지는 <http://www.kosef.re.kr/prcu/>.

실체를 전문도서관의 범주 안에서 소화하기 위한 개념의 재구성과 통계요소 및 대상의 재검토가 요망된다.

## 2. 도서관법상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관련규정

사실 전문도서관의 정보서비스활동은 모 기관 본래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수단적 방편으로 설정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도서관 정책을 관장하는 국가에서조차 법적 통계를 통한 실질적 개입이 어려운 영역으로서, 일관된 도서관정책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적 특성을 갖고 있다.

당초 1963년 제정된 초기 ‘도서관법’ 제4조에서는 전문 및 특수도서관에 대한 적용배제를 명시한 규정에 따라, 전문도서관 활동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마련한 법적 혜택의 범주에서 제외하며 출발하였다. 문화부발족 이후 제정된 1991년 ‘도서관진흥법’과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도 명분상 국립중앙 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및 대학도서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정에 위임하고 있고, 전문 및 특수 도서관에 대해서는 설립에 대해서만 간단히 정하고 있을 뿐, 사실상 공공도서관 활동을 위주로 하는 공공도서관법적인 성격이 강하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1, 2에서는 전문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과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대한 최소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동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전문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보면 “봉사대상을 공중으로 하고,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만점)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열람실 면적과 자료기준 역시 현실적인 구속력을 갖는 기준은 되지 못한다.

한국도서관통계에 집계되어 있는 전문도서관들의 대부분은 기업이나 단체의 부속시설로서, 현실적으로 공중을 대상으로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은 드물다. 민간 전문도서관들은 이용자격에서 제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배타적인 정보봉사를 관행으로 하며, 시설 및 자료의 여건에서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도서관이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은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법규상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민간부문의 전문도서관 활동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은 되지 못한다. 전문도서관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분담하는 정부관련 기관들도 자체의 기관설립 및 운영을 근거하는 설치법령에 따라 전문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전문도서관이라고 하여 이들을 별도의 기준법령으로 통제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없다. 다만, 국가는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도서관들에게 실질적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이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전문도서관들이 자발적으로 최소기준을 준수하도록 간접적 유인체계로서 지원정책이 구상되어야 한다.

한편, 디지털 정보자원만을 매개하는 전문연구정보센터들은 네트워크 상에서 해당분야 전문정보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규상의 물리적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문도서관의 범주에서 빠져있고, 한국도서관통계에도 집계되어 있지 않다. 열람실공간을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문헌매체와 같은 실물자원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들 전문연구정보센터들은 엄연히 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정보서비스 기관들이다. 장래의 전문도서관 활동공간으로 비중이 설정된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현실성 있는 개선이 요망되는 사안이다.

전문도서관 디지털 자원관리와 관련하여, 정부 및 관변기관 보유 디지털자원을 대상으로 통합관리를 명시한 정보통신부의 '지식정보자원관리법'(법률 제6232호, 2000.1.28제정. <http://www.lawkorea.com/law/> cited 2002.6.20)은, 국가 지식정보자원관리의 책임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등을 배제하고, 정부관련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들의 디지털자원을 대상으로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의 내용은, 문헌자원관리의 연장선상에서 전문정보 센터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를 포괄하는 수준에서 국가적 차원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막고 자원개발의 역할분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내용의 '(가칭)국가지식정보자원통합관리법'과 같은 범정부 수준의 재검토가 요망된다.

### 3. 부처별 디지털 지식정보자원 유통정책 경쟁

한국도서관통계에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전문도서관활동은 해당주제별 전문단체 및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부속기능에 따라, 전방위적으로 산재 하고 있다. 그중 정부관련 전문도서관들의 정보서비스 비중은 국내 지식자원유통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문헌을 매개로 하였던 환경에서는 정부기관 내 부속 전문 도서관들의 활동이 국가지식정보자원 유통의 핵심공간으로 기능하여 왔고, 따라서 도서관정책을 관장하는 정부부처가 국가 지식정보관리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에 참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인터넷기반의 디지털자원 유통이 국가지식자원 유통형식으로 확산되면서, 이들 새로운 형식의 자원관리에 대한 부처 간 주도권 경쟁으로 인해, 문헌자원 유통채널과 디지털자원 유통채널이 분리되는 불합리한 유통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국내 주요 정부관련 전문도서관들이 보유한 디지털자원에 대한 통합접근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구축된 정보통신부의 국가지식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은, 지식정보자원 유통과 관련한 부처간의 주도권 경쟁을 확인시켜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진다(<http://www.knowledge.go.kr/>, cited 2002.6.20).

지난 2000년 1월 정보통신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제4조) 모든 지식정보자원에 관해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적용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학

술 문화 또는 과학기술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지식정보자원'이라 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에 의해 관리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 하였다.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등장한 것이 '국가지식정보자원 통합검색시스템'으로, 5개의 분야별 종합정보센터를 지정하여 통합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분야별 종합정보센터로는 과학기술분야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교육학술분야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문화예술분야는 한국문화정책개발원(KCPI), 역사분야는 국사편찬위원회, 정보통신분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들 외에도 통합검색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2002년 5월말 현재 독립기념관, 문화관광부, 산림청, 산업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영상자료원, 해양수산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http://www.knowledge.go.kr/>, cited 2002.6.20).

정통부의 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의 국가전자도서관 시스템에서 계획하고 있는 디지털 자원의 유통계획과 별도로 국가적 수준의 디지털 유통시스템을 중층적으로 구축하는데 따르는 중복투자의 성격이 짙으며, 국가전자도서관 시스템과의 차별성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구상이다. 실제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디지털자원들은 양쪽 시스템 모두에게서 제공되고 있다. 기존의 문헌자원과 디지털자원의 납본을 통한 국가지식정보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국립중앙도서관과, 정부행정기록물에 대한 수장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처의 국립기록보존소 등과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수행되는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유통 시스템의 구축은 일면, 기술경쟁을 통한 대안적 활로를 모색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문제는 이들 정책들이 자칫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유통채널을 다중화시키면서 불필요한 예산중복과 자원분산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식정보자원관리에 대한 부처 간 정책조정과 통합의 기술적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과도한 경쟁은 오히려 국가적 비용지출과 시행착오를 불러와 국가적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에 심각한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문화관광부의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전자도서관, 국회의 국회도서관, 교육인적자원부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서울대학교 도서관, 과기부의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 총무처의 정부기록보존소, 국무총리 산하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재단 지원의 전문연구정보센터 등은 정부부처 소관의 대표적 도서관 및 정보센터들로서 각각 국가정보유통의 한 부분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들이다. 이들 기관별로 수립되어 추진되는 자원개발과 유통에 관한 장기발전 및 투자전략 등은 도서관 상호간의 역할분담과 자원개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협의



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 4. 전문지식정보 자원관리에 대한 국가정책 부재

전문도서관 활동은 그 특성상 개별 주제 분야별로 국가정책에 따라 운영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대개가 특정 정책과 관련되어 입안된 법적 지원에 근거해 활동하는 모기관을 갖고 되고, 모기관의 대외적 영향력에 따라 소속 전문도서관의 지위와 역할이 많은 변화를 겪는 것은 전문도서관 활동의 특성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정책을 대표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지난 1962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 설립이래 올해로 40주년 맞았다. 하지만 기념행사는 기관 내부로 거행되었고, 정작 그 의미의 중요성을 정리하는 기관발전 40년사와 같은 출판물은 간행되지 않았다. 이는 그간 개발성장기의 어느 부문 못지 않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체험한 기관의 통폐합 과정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결과로, 그만큼 기관 내 사업과 인력의 불연속성이 40년 전통의 정체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이는 물론 한국과학기술정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정책의 불연속성을 함축하는 실례일 것이다(<http://www.kisti.re.kr/intro/index5.html>, cited 2002.6.20).

- 1962년 문교부 소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설립
- 1967년 과학기술처 발족으로 소속 변경
- 1969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육성법’ 제정
- 1982년 국제경제연구원과 통합  
상공부 산하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IET)’으로 명칭 변경
- 1984년 ‘산업연구원(KIET)’으로 개명
- 1988년 산업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보센터’ 설립
- 1991년 ‘산업기술정보원(KINITI)’으로 독립법인화
- 1999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술연구회로 소속 변경
- 2001년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와 통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발족

통폐합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전문정보 서비스영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산업기술 분야로, 다시 과학기술분야로, 명칭의 변화 못지 않게 서비스 표적과 자원개발의 초점이 전문도서관 정보활동의 일관성을 해치는 수준으로 반복되었고, 이것은 전문인력 수급의 불안정성과 함께, 수준 높은 전문정보서비스 수행에 결코 유리한 환경으

로 기대할 수 없었다.

과학기술분야 대표적인 전문도서관의 발생과 변천을 통해 추정되는 사실은, 그간의 소속변경과 명칭변화의 내용이 단순한 환경적 영향력의 수준을 넘는 과도한 변화였다는 점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역사적 변천과정은 곧 해당기관의 지위변화라는 제한된 의미로서보다는, 국가의 과학기술 정보에 대한 정책부재의 본보기이자, 국가적 차원의 전문도서관 정책부재를 생각하게 하는 사례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정한 환경요인은 정부관련 전문도서관 뿐만 아니고 민간부문 전문도서관 활동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전문도서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포괄적인 발전전략이 요청되는 기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 IV.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정책 제언

### 1.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개념과 범위의 확장

문제점에서 지적하였듯이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정의나 개념은 고정된 것일 수 없다. 따라서 전문도서관으로 집계된 통계의 범주가 명확히 설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같은 개념의 유동성은, 전문도서관 운영 현실의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한 역사적 조건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에서의 전문도서관의 인식수준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이 모호한 전문도서관의 개념과 범주는, 시대적 변화와 전망의 추세를 반영하는데 소홀하였던 도서관계의 소극적 자세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로 전문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성격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실상 전혀 새로운 정보주체로서의 디지털자원서비스를 매개하는 전문연구정보센터가 등장한 것도 이미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진행되어 온 변화이었다. 그럼에도 그간 전문도서관의 집계와 그 통계요소에 네트워크 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점은, 전문도서관 활동의 공식적 집계표로서 기능하는 통계의 성격상, 우리나라 전문도서관 활동의 실적을 전통적 문헌서비스 공간으로 한정하는 인식의 오류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도치 않은 간접 책임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 상 웹사이트로 제공되는 전문연구정보센터들이 스스로를 전문도서관의 활동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여부와는 별도로, 새로운 정보 서비스 주체들로 등장한 이들 네트워크 정보센터들을 기존의 전문도서관 협의조직과 연계하여, 새로운 전문정보 협력조직으로 유인함으로써, 전통적인 전문도서관 활동공간을 확장하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문도서관의 통계에 적용되어온 조사항목에다가, 디지털자원을 서비스하는데 따르는 기능적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이들 전자도서관적 성격의 전문정보센터들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성격과 이미지를 문헌자원과 디지털자원을 포괄하는 전천후 정보서비스 주체로서 사회적 인식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전문 도서관 및 정보센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포괄하는 정보주체로서, 디지털 자원을 매개하는 가상도서관의 기능이 별도의 정보센터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는 일은 도서관인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에서 제시된 전문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역시 전자정보 서비스를 매개하는 전문연구정보센터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동 법상의 전문도서관 개념 역시 현실적 여건에 부합하도록 다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 2. 범국가적 지식정보 조정기구 설치

우리나라 행정 부처들은 디지털자원에 대한 통합서비스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면서 정작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정보자원의 개발과 유통에 대한 거시 전략을 함께 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원래 ‘도서관및독서진흥법’상에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두고 국가의 균형있는 도서관발전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설치이후 뚜렷한 실적이 없이 명목만 유지하다가 지난 1999년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폐지되는 비운을 겪었다. 그러나 여기서 제안하는 국가지식정보 개발정책 조정 기구는 이전의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복원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실 문화관광부 산하의 위원회 조직으로서는 부처마다 경쟁하는 정보정책을 조정 하는 것이 무리한 기대였고, 사실상 정부 내 조정기능을 수행할 위치도 주어지지 않았었다.

해당 정부부처의 정보자원 개발정책에 따라 현저한 영향을 받게 되는 전문도서관의 특성상, 부처별 전문정보 개발 및 유통정책을 종합하는 일관된 정책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부처별 정보정책을 조정하고 국가적 수준의 지식정보 자원개발을 통합하는 것은, 어느 한 부처에 의해 주도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정책 조정기구는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정보유통정책 협의기구’로 구성되어 도서관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지식정보자원 유통정책 전반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정보정책이 집행되도록 조정하는 역할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조정기구의 구성에는 도서관계, 출판계, 과학기술계, 정보통신계, 기업계, 교육계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서로의 이해를 조율하는 협의기구로서 부처별 정책의 근간을

조정하는 상위기구로 역할이 바람직하다.

이 기구는 미국 대통령직속 ‘도서관 및 정보과학에 관한 전국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도서관 및 지식정보유통 정책에 대한 명실상부한 최고기구로서 역할이 설정되어야 한다. 참고로 미국의 ‘도서관 및 정보과학에 관한 전국위원회(NCLIS)’는, 대통령직속의 상설조직으로 미국내 도서관 및 정보현상에 대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등을 수행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에 도서관 및 정보정책에 대해 제안하며, 관련연구 활동을 후원하거나 문제사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일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가정보정책의 조정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10)</sup>

위에서 지적되었듯이 부처마다 디지털자원의 유통에만 경쟁적으로 몰두하다보니, 전통적 문헌자원에 대한 수집과 이용을 지원하는 국가문헌자원 유통시스템의 정비가 상대적으로 국가적 관심에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불만은 도서관계의 소외감을 가중시키는 현실적 논쟁 사안의 하나이다.

대부분 정보선진국의 정보유통구조는 철저히 전통적 도서관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디지털자원 유통에 대한 책임까지도 이들 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LC가 그렇고, 영국의 BL이 그렇듯이 문헌자원이든 디지털자원이든 관계없이 국가적 지식정보자원의 수집과 보존의 주체는 국가대표 도서관이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디지털자원의 납본을 통한 수집정책을 입안하면서 기본적으로 문헌자원을 관장하는 도서관에 그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정보유통시스템에서 문헌자원과 디지털자원은 형식의 차이일 뿐이며,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은 동일한 유통망 속에서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

### 3. 민간부문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활동지원의 제도화

앞서 보았듯이 국내 전문도서관활동의 대부분이 정부관련 기관들에 주도되고 있지만, 민간단체 및 사기업부문에 속하는 전문도서관의 수 또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있어서 전문도서관은 “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민간의 전문도서관들은, 기업 부설 자료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같이, 자료실운영 동기가 모기관의 수익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전문도서관의 범주로 간주하기에는 상대적 제한성이 있는 자료실들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민간보유 정보자료는 동종의 사업기관 간 공유자원으로 유통되고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을 제공하는가 여부에 따라서는 공공적 지식정보자원으로 그 의미의 확장이 가

10) 이순재. “미국의 정보봉사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사적부문간의 갈등과 상호작용.” 동래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13집 (1994), pp.53-69.”

능하다. 이들 민간보유 지식정보자원은 분야별 전문도서관협의회와 같은 자발적 동기의 전문도서관 협력네트워크에 가입함으로써 공공자원으로 승화될 수 있다.<sup>11)</sup> 이를 위해서는 전문정보자원을 보유한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들이 호혜적 입장에서 서로의 자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필요하며,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혜택으로 주어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보개방을 조건으로 민간 전문 도서관들에 대하여 표준화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방안은 좋은 유인동기가 될 수 있다. 이는 PC 통신 사업 초기에 공공정보DB구축 지원 사업에서 한국통신이 투자하였던 전례와 같이, 공공적 자원으로 개방되는 정보자원에 대해 기술 및 세제지원의 혜택으로 주어져야 한다.

역사적으로 사회발전의 계기는 항상 해당 공동체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유하는가에 의존한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바탕은 국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공적 전문정보의 유통이 얼마나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있느냐에 좌우될 수 있다.

#### 4. 연구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위한 선결과제

네트워크에서 전문정보자원의 개발자이자 제공자로서 경쟁해야하는 전문도서관으로서 는 해당분야 정보주체들과의 협력활동이 장래의 지식정보 유통주체로서 생존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처럼 전문분야별 협력시스템이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하위분야별 전문도서관 협력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별 도서관간의 원활한 정보유통을 지원하는 표준화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의 보급이 요망된다. 분야별 협의회 조직이 주체가 되어 개별도서관이 보유하는 서지정보는 물론이고, 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의 전문화된 지식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정보관리 디지털라이브러리시스템“의 모형 개발과 보급이 지적될 수 있다. 분야별 실질적 협력기구로서 호혜적 자료이용 및 원문서비스에 대응하는 전문주제별 하위시스템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기술적 환경을 구축 하여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sup>12)</sup>

한국도서관협회와 전문도서관협의회는 각각, 문헌 및 디지털자원 관리 형식의 표준을 제시해 주는 것과, 통합자원관리시스템운영을 주관하는 역할분담이 요망된다. 전문분야별 통합자원관리 및 유통시스템의 개발과 표준을 제시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KISTI의 과학기술정보 통합관리 및 유통시스템의 개발경험에서 일정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인 KOLASII의 개발과 KOLIS-NET의 구축과정에서 수행하였던 임무와 같은 것으로서, 국가기간전산망 계획상 연구전문 도서관

11) 신은자, 오경목. “전문도서관의 정보자원 공동활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vol.32, no.3/4 (2001. 12). pp.56-72.

12) 신은자, 오경목. 전제서. pp.69.

망의 책임기관으로서 KISTI가 부여받은 본래의 임무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사안이다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사업에서 연구전문도서관망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주관하고 대학도서관망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주관한다는 구상에서는, 실제 이들 분야 도서관자원의 대부분이 연구목적의 학술 자료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연구전문도서관망과 대학도서관망으로 분리 운영하도록 한 비합리적인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서관망의 분담 주체에 있어서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보유자원이 없이 기능에 있어서만 대학도서관의 통합창구를 맡고 있어, 실질적인 대학도서관들의 대표 역할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보유자원에 있어서나 기능에 있어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을 대표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위상과는 구분되는 역할이다.

국내 대학들은 점차 교육기능에서 연구기능을 강조하는 선진국형 경쟁 시스템으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국내 대학도서관망과 연구전문도서관망의 자원통합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전문연구정보자원 통합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점증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대학도서관 통합서비스 기능은,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의 전문연구도서관망과의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 향후 연구자원의 통합 활용과 관련해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초고속연구망 사업과 슈퍼컴퓨팅센터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 환경과 과학기술분야 전문연구정보센터에 대한 통합검색시스템에서 쌓아온 소프트웨어 인프라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대표 도서관은 해당 분야별 망라적인 자료수집과 체계적인 보존을 책임져야 한다. 특히 접근위주의 해외전자저널에 대한 서비스 전략은 당장 개별도서관에게 비용을 줄이는 경제성을 줄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지식정보 개발전략으로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국가대표도서관은 이 같은 접근만의 정보정책이 갖는 허구성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전자저널과 문헌자원을 포함하는 모든 유통자원에 대해서 체계적이고도 망라적인 수집과 보존을 수행하여, 유사시 정보자원을 동원한 국가적 분쟁이나 흑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정보선진국의 상업적 횡포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대표 도서관의 역할이 다중적으로 설정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법적으로 국가대표 도서관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기왕에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별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인문과학 분야에, 국회도서관은 사회과학분야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해 각각 납본업무와 국가서지 발간, 저작권 관리 등에서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문도서관 협력시스템이 확대되어, 전문분야별로 대량정보자원이 구축되면, 이들을 탐색하는 검색시스템의 효율성이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여기서 문헌정보학계의 연구

자들이 해야 할 역할의 하나는, 우리의 자료조직 및 검색시스템 운영경험에서 축적된 전문분야별 주제명표목표(Subject Headings)나 시소러스, 분류표, 전문용어 우리말 대역사전, 인명 및 단체명 전거파일 등의 기초적인 검색지원용 상관색인 등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역할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통합검색 환경을 지원하는 제대로 된 전문 분야별 탐색지원 도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도서관 협력시스템이 진전되면서, 전문정보검색의 효율성 문제는 심각한 현안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전문화된 시소러스, 분류표나 용어 대역사전 및 전거 파일 등의 탐색지원도구 개발에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분발이 요청되는 바이다.

## V. 결론 -요약

우리나라의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는, 그 기능적 주제전문성으로부터 구분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공공, 대학, 학교 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을 포괄하는 망라적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한국도서관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문도서관의 장서수준과 인적구성이 매우 영세한 수준이며, 전체 전문도서관 중 정부관련 도서관 활동의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현재 전문도서관 협력활동이 활발한 협의회는 의학분야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과학기술분야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신학분야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사회과학분야 한국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 등 8개 조직이 활동하고 있었다. 전문도서관 협력활동의 상당수는 해당분야 소장자료에 대한 공동목록과 상호대차를 제공하는 초보적인 수준이었지만, 일부 협의회는 회원 기관 간 신속한 원문복사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자원공유 시스템 구축 등 비교적 내실있는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협력활동은 궁극적으로 자원개발과 서비스에 이르는 정보활동에 있어 체계적인 수집분담과 공동활용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서관 협동사업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정보수요에 따른 자발적 참여와 기술적 투자를 발전의 추동력으로 삼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원활한 정보유통기술을 지원하는 정보공유 및 검색시스템의 기술적 표준의 제공과 합리적인 정책형성을 통한 제도적 지원대책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전문도서관의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주요 사안으로서는, 1)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개념 및 범위의 혼란과, 2) 도서관 관련법상의 전문도서관 규정의 미흡 3)부처별 디지털 지식정보자원 유통정책에 대한 경쟁, 4) 전문지식정보 자원관리에 대한 국가정책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이들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1)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개념 및 범위의 확장, 2) 범국가적 지식정보 조정기구 설치, 3) 민간부문 전문도서관 및 정보센터 활동지원의 제도화, 4) 도서관 정보활동 효율화를 위한 선결과제 등을 제안하였다.

## 참고자료

- 김두홍. “역대정부의 과학기술 정보정책 분석 및 평가.” 정보의 세계. 부산: 부산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동창회. 1993. pp.250-296.
- 신은자, 오경목. “전문도서관의 정보자원 공동활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vol.32, no.3/4 (2001. 12). pp.56-72.
- 이순재. “미국의 정보봉사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사적부문간의 갈등과 상호작용.” 동래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13집 (1994). pp.53-69. <http://sb.dpc.ac.kr/%7Esjlee/report/3-1.html/>. (2002.6.20)
-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10년사. 서울: 동 센터. 1972.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백서. 서울: 동 협회. 1992.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서울: 동 협회. 2001.
- Mount, Ellis & Massoud, Renee. Special Libraries & Information Centers, 4th ed. -Washington,D.C. : Special Library Association. 1999.